

「2012년 8월 25일 2차 일반경찰공채 경찰학개론」

2012년 2차 일반채용 출제경향 총평 : 경찰학 박상규(PSK)

미래의 경찰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장에서 풀어본 기출문제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번 2차 채용시험 경찰학 개론 과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 기존에 경찰학 출제 유형의 구성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험 초기에 기출문제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론10문항(경찰개념1문항, 한국경찰사1문항, 경찰법학5문항, 경찰관리론3문항), 각론10문항(생활안전2문항, 수사1문항, 교통2문항, 경비1문항, 정보2문항, 보안1문항, 외사1문항) 등 총 20문항 중 박스형 개수 고르는 문제 7개와 판례 형 문제 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둘째 : 최신 개정 법령과 신설된 내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1차 시험과 비슷하게 이번 2차 시험에도 개정된 경찰법 및 실종아동등가출입업무처리규칙,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벌칙강화 등이 개정사항이 바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사항과 신설된 최신이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 경찰법학 행정법 부분은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조문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되었고, 정통적인 행정법 이론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니다. 경찰조직법 관련 조문관련 문제는 앞으로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을 것을 대비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넷째 : 경찰실무와 관련된 판례문제가 지난 시험에 이어 이번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예상됩니다.

다섯째 : 박스문제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스형 문제에 대한 대비로서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닌 정확하고 철저히 암기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 한국경찰사 문제와 수사문제가 1문제씩 출제되었고, 근래 출제되지 않고 있는 외국경찰사 부분은 역시 출제되지 않았습니니다. 지난 1차 시험 때 출제되지 않았던 한국경찰사 부분이 1문항 출제되었는데, 앞으로도 1년에 한 문제 정도의 비중을 두고 준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영역은 생활안전경찰과 수사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여전히 수험생의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았을 때 수험생의 학습능력과 공부에 대한 초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의 지문과 기존기출과의 비교시 중상 정도의 난이도 같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시험 마지막 정리에 고민을 주는 경찰학은 범위가 광범위 한 만큼 항상 기본에 충실하며, 한 개단씩 영역을 넓혀가며 반복하는 방법을 갖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학의 합격스타일은 꿈수보다는 진정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 동안 시험준비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였고, 결과는 마음 편히 기다려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 ② 197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③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① 계몽철학은 법치국가 시대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2차 대비 문풀 1장 3번 문제 유사출제)

2.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종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 198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 경찰에관한한일협정’ - ‘경찰사무에관한취급서’ - ‘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①

해설:틀린 것(㉡㉢㉣)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종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198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경찰사무에관한취급서’ -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 경찰에관한한일협정’ - ‘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마무리특강 140문항 중 16, 17번 문제 유사출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찰행정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경찰행정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이에 해당한다.
- ②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의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경찰행정기관을 경찰의결기관이라 하며,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다.
-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정답:④

해설:① 경찰행정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경찰행정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이에 해당한다.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②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의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경찰행정기관을 경찰의결기관이라 하며, 경찰위원회가 있다.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2차 대비 문풀 2장 14번 문제 유사출제)

4. 각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해설:㉠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2차 대비 문풀 2장 16, 17번 문제 유사출제)

5.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법령준수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
㉣ 제복착용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종교중립의 의무	㉬ 지휘권 남용금지의 의무

- 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 ②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2개
- ③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 ④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정답:②

해설:국가공무원법상 의무(㉠㉡㉢㉣㉤㉨㉩㉪㉫㉬),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이다.(2차 대비 문풀 2장 40번 문제 유사출제), (마무리특강 140문항 중 37번 문제 유사출제)

6.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정답:④

해설: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무기는 경찰장비의 종류에 해당한다.(2차 대비 문풀 2장 93, 98번 문제 유사출제)

7.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여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 ②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 ③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서로 모순되는 지시가 나오고, 이로 인해 집행하는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명령통일의 원칙이 요구된다.

정답:①

해설:① 계층제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계층 간에 직무상 지휘·감독 및 명령·복종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전문화·분업화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2차 대비 문풀 3장 6번 문제 유사출제)

8.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 ②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①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②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옳은 지문).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2차 대비 문풀 2장 71-91번 문제 유사출제)

9.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차 대비 문풀 3장 28번 문제 유사출제)

10. 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관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 ③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 ④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③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등이 있다.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사후통제제도에 해당한다.(2차 대비 문풀 3장 44,45,47번 문제 유사출제) (마무리특강 140문항 중 51번 문제 유사출제)

11.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 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 ② 남편(A)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 ③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정답:④

해설: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남편(A)에 대하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입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접근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유치신청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위 ㉠, ㉡, ㉢의 임시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 임시조치 중 금지명령의 성격을 갖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무리특강 140문항 중 139번 문제 유사출제)

1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은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 ㉢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회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④

해설:모두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2차 대비 문풀 각론 1장 79, 81번 문제 유사출제), (마무리특강 140문항 중 66번 문제 유사출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③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 ④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①

해설: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인정된다.(2차 대비 문풀 총론 2장 102번, 각론 1장 65번 문제 유사출제)

14. 경비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IGN, 프랑스의 GSG-9 등이 있다.
- ② 진압활동시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도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 ③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경찰청이다.

정답:②

해설: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PN(경찰), GIGN(군)등이 있다. ③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이다. 경찰은 현장통제 등 구조 및 피해복구 지원업무를 담당한다.(2차 대비 문풀 각론 3장 26,37,55번 문제 유사출제)(마무리특강 140문항 중 101, 103번 문제 유사출제)

15.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위반행위는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오후 1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 ①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 ②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
- ③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④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정답:④

해설:④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0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칙강화시간인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마무리특강 140문항 중 88번 문제 동일적중출제)

16.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 ㉡ 19세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 ㉣ 면허 있는 자가 약물·과로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
-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①

해설:㉡ 만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다.(2차 대비 문풀 각론 2장 40, 49번 문제 유사출제)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상시위·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5db이하이다.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사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사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① 해상시위·공중시위,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단, 군 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는 신고대상이다.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0db이하이다.(2차 대비 문풀 각론 4장 35,42번 문제 유사출제)

18.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 ㉡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차 대비 문풀 각론 5장 36,41번 문제 유사출제)

19.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따른다.
- ②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 ④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①

해설:①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먼저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른다.(2차 대비 문풀 각론 6장 36번 문제 유사출제)

20.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③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차 대비 문풀 총론 3장 49번 문제 동일적중출제)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PSK(박상규)

경찰합격의 믿음 (1등 PSK 경찰학)

— Wide 한 경찰학 Easy하게 —

가장 듣고 싶은 강의 100% 합격자신감

경찰합격을 위한 교재 (psk발간)	1. psk 경찰학 기본서 2. 통합 객관식문제집 3. 올백모의고사 4. 에스프레소 요약노트 5. psk 경찰학 o.x문제집
---------------------------	---

수험상담 : <http://cafe.daum.net/pskpolice>